

광주 신축 공사장 또 '자재 낙하사고' 발생

시멘트 자재 날려 8대 피해...인명피해는 없어 지난 12일에도 콘크리트 넘쳐 차량 14대 파손

광주의 한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시멘트 액체가 떨어지면서 차량 수대가 피해를 입었다. 이 공사현장에서는 지난 12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지만 5일 만에 또 발생해 행정당국이 안전 점검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서구 쌍촌동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시멘트 액체가 도로쪽으로 떨어졌다.

시멘트 액체는 안전 가림막을 넘어 도로가로 떨어져 지나가던 차량 3대와 공사차량 5대 등 총 8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는 오피스텔 외벽 시멘트 마감

공사를 하던 중 일명 '시멘트폭포' 불리는 액체가 떨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도 같은 공사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에는 거푸집을 설치해 콘크리트 타설 공사를 하던 중 원료가 넘치면서 쏟아져 도로가에 정차·주행 중인 차량 14대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는 같은 공사현장에서 5일만에 비슷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공사현장 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했으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다.

서구 관계자는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는 주변 차량의 피해가 예상돼 비닐 등을 씌운 뒤 작업을 한다"며 "이같은 조치는 선행됐지만 강한 바람에 시멘트 폭포가 날려 보호조치가 안된 차량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러 "공사업체가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세차 등을 약속했으며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현장 안전조치 강화를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오유나기자



완도해경, 수산물 원산지 점검으로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해

완도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수산물품질관리원 완도지원, 완도군청과 합동으로 수산물 유통업체, 횡집 등 관내 수산물 취급업체의 원산지표기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 하였다.

완도=기동취재본부



고흥경찰, 주택가 빌라 벽면으로 번진 불길 초기 진압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고흥읍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인적 피해 없이 초기 진압했다고 밝혔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경찰, 공동체 치안 활성화 위한 자율방범대법 설명회 개최

광양경찰서 생활안전과는 지난 11일 관내 자율방범대 임원진 14명을 대상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자율방범대법)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양=김현근기자



순천경찰 왕조지구대, 합동순찰단 활동 실시

순천경찰서 왕조지구대는 지난 12일 왕조1동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합동 순찰단을 조직하여 상가가 밀집되어 있는 수산시장 사거리 일대에 대하여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기자



무안소방, 23년 화재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

무안소방서는 지난 12일, 불철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2023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행사를 진행했다.

무안=이성기기자



여수소방, 삼산면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전달식 개최

여수소방서는 지난 11일 삼산면 거문리에서 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화재감지기)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

'법 위에 법'?...공무원 노조 등 37% '불법' 단체협약

고용부, 공공부문 단협·노조규약 실태확인 결과

고용노동부는 올해 3월부터 공공 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의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 실태를 확인한 결과, 총 479개 기관 중 179곳(37.4%)의 단협에서 불법 또는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총 48개 공무원·교원 노조 규약 중에서는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를 파악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송과구정 단체협약과 전국공무원노조 규약 등에서 불법·부당 관행이 드러나 정부가 시정조치에 나선 가운데, 공공부문의 단협과 노조 규약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상은 공무원 165곳, 교원 42곳, 공공기관 272곳의 단체협약이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199곳(41.5%), 한국노총 123곳(25.7%), 미가맹 등 157곳(32.8%)이었다.

우선 불법·무효인 단체협약을 보면 공무원의 경우 정책 결정이나 임용권 행사는 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사가 이를 단협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많았다.

구체적으로 ▲구조조정·조직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 금지 또는 노사 합의에 따른 정원 조정 ▲인사위원회에 노조 추천 외부인사 포함 ▲성과상여금 집행 전 노조와 합의 등이다.

법령에 반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었다. 단협의 내용이 조례나 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단협 내용에 맞춰 이를 제·개정하거나 단협에서 정한 기준이 노동관계 법령보다 우선한다는 규정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따른 판단 절차 없이 노조 활동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 재해로 간주하거나, 특별로 정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조별휴가를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내용도 적지 않았다.

이와 함께 총 48개 노조 규약을 살펴본 결과 조합원의 노조 탈퇴 권

한 침해, 노조 임원의 선출 절차 위반 등 6개 노조 규약에서 노조법 위반 소지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번 조사에선 위법은 아니지만 불공정 특혜 등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도 135개(28.2%)나 파악됐다. 금과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퇴직 또는 해고 대상이나 노조 간부의 조합 활동이라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등이다.

고용부는 확인된 사항 중 '불법'인 단체협약과 노조 규약은 즉시 노동위원회 의견을 거쳐 시정명령 조치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합리' 등으로 판단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계 부처와 합계 적극 지원해나갈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노사를 불분하고 각종 불법과 특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타협

도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사도 스스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이날 정부 발표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노동법 기본 원칙을 무시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법은 최소한의 기준이고 단체교섭과 협약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기본"이라며 "이를 무시하고 단협 규정이 무조건 위법하다는 정부의 판단은 노사관계의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라고 했다.

또 구조조정 등 결정 시 노사 합의 조항을 둔 데 대해 "노동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노조가 참여·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정부의 발표는 '공공기관을 불분하고 노사 자치교섭 및 단체협약 존중과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98조 위반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노조 패러기식 단협 시정명령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변용일기자

비방 현수막 놓고 강기정 시장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충돌

강기정 광주시장이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에서 일부 5·18단체 회원들과 충돌했다.

17일 복수의 목격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정문 앞 삼거리로 지나던 한 차량이 멈춰서더니 수행원으로 보이는 남성들과 강 시장이 차레로 내렸다.

강 시장을 포함한 이들은 곧바로 강 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제거하려 했다.

해당 현수막을 내건 일부 5·18단체 회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강 시장과 고성을 주고받는 등 설전을 벌였다. 일부 5·18단체 회원들은 강 시장의 차량을 막아서기도 했다.

이 장면을 목격한 한 시민은 "양측 간 불협사나운 모습이 연출됐다"고 말했다.

양 측의 협박한 분위기는 민주묘지 내부로까지 이어졌다.

'민주의 문' 인근에서 마주친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이 강 시장에게 "폭바로 하라"며 항의하자, 강 시장도 언성을 높였다.

강 시장과 황 회장은 오월 영령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추모제 참석을 위해 이날 민주묘지를 찾았다.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는 지난 15일 강 시장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5·18교육관 위수막 단체 공개모집 과정에 강 시장 등의 부당한 개입으로 공모에서 탈락했다며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광주시는 5·18교육관 위수막 단체 선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심사위원회는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 독립적이며 공정·투명하게 심사했다는 입장이다.

이들 단체의 고소장 제출 이후 강 시장은 "5·18은 어느 한 사람, 어느 한 단체의 것일 수는 없다. 수많은 '나'들의 것이어야 한다"며 이들의 행보를 비판했다.

해당 단체들은 국립 5·18민주묘지 정문으로 향하는 1km 구간 도로 주변에 '독선과 오만 끝이 없다' 한번 불통은 영원한 불통 '강기정은 물러가라'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등의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내걸어 놓았다.

이슬비기자



오늘 낮도 더워요!

한낮 무더위가 예고된 17일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시민들이 시원한 물줄기를 보고 있다.